

새로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原子力政策의 추진방향

鄭 根 謨

과학기술처 장관

鄭根謨 과학기술처 장관은 지난 1월 26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68차 원자력계 월례 기술회의」에서 '새로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원자력정책 추진방향' 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강연에서 鄭 장관은 "원자력을 둘러싼 새로운 세계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갖추는 것이 국내 원자력산업계의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원자력 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 원자력폐기물관리시설의 완벽한 건설, 원자력협력외교 강화와 적극적 해외진출, 원자력 안전성 제고,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추진 등을 원자력정책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그 강연문 全文을 실는다. (편집자)



序 言

우리나라 原子力界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들과 오늘 귀중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韓國原子力産業會議 이종훈 회장님과 韓國原子力學會 임용규회장님 그리고 美國 原子力學會 한국지부를 맡고 계신 강창순 회장님과 바쁘신 중에도 이른 아침 참석해 주신 원자력계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세계화를 통한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중차대

한 시대적 과업을 수행해야 될 시기에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을 책임지는 소임을 다시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귀한 자리를 빌어 최근 원자력과 관련한 일련의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원자력정책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원자력계의 발전과 원자력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원자력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변화

어느해나 특별하지 않은 해가 없지만 1995년은 어느 해보다도 많은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기에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결정하는데 더욱 중요한 한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으로는 분단 50년을 마감하고 통일을 향하여 새롭게 출발해야 하며, 밖으로는 WTO 출범에 따른 개방과 자유무역이라는 새로운 세계경제체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중단없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고, 현재 출연연구기관도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적인 개혁방안 모색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원자력을 둘러싼 일련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적으로 우리 원자력산업은 1962년 TRIGA MARK II의 가동을 계기로 원자력의 씨앗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후 30여년만에 세계 10위권의 원자력발전국으로 성장하여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원자력 이용국의 하나로 평가받게 되었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실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표준원전 설계를 통하여 최근에는 원자력기술 수출과 대북경수로 기술지원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자력계의 중지를 모아 『2030년을 향한 원자력장기정책방향』이 성안되었고, 중국과 원자력 협력협정 체결,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과의 협력증진을 위한 발판마련과 함께 터키와는 원전 타당성조사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동구권국가들과의 협력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분야의 커다란 숙제였던 원자력폐기물 처분장 부지가 선정되는 등 많은 희망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전력수요는 2006년에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자원의 부족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환경오염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의 지속적인 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RI)의 의학·농학·공학적 이용은 더욱 확대·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기술수준은 대규모 원자력발전소사업 추진과정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소화하여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상용·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여건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며 국내 RI 생산능력 및 이용기술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국제적으로는 동서 냉전체제 붕괴와 지구환경문제 대두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재평가 계기가 마련되어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를 원자력의 새로운 부흥기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자원이 빈약한 나라의 전략적인 에너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이외의 분야에 있어서도, 원자력은 급속히 발전하고 핵의학, 첨단산업 기반기술연구, 생명공학연구와 관련된 원자력의 응용개발 등 미답의 과학기술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주요 과학기술적 수단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는 '95년 정부예산에 신형원자로 개발 및 원자력이용 관련예산을 반영하여, 원자력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세계 1위의 기술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원전건설과 운영허가 등의 인허가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원전건설의 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정부 주도로 원자력개발체제를 확립하여 '93년말 기준 원자력발전량은 총 발전량의 77.7%를 차지하고 있고, 총 발전량의 12%를 수출하는 등 원자력이 국가 에너지원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80년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원자력 발전소 조기폐쇄 조치를 '91년 의회에서 다시 철회함으로써 원자력의 지속적인 이용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자력개발·이용 장기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초까지 고속증식로 실증로 준공 및 2010년경 재처리 시설 완공 등 핵주기정책을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자원이 풍부하여 에너지원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중국까지도 21세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전력난에 봉착하여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동남지역을 중심으로 광동 1·2호기의 상업운전에 이어, 진산 2·3호기의 건설 및 광둥 3·4·5·6호기의 건설계획 등 의욕에 찬 원자력사업계획을 착실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 등 개도국들도 21세기 초반에 원전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등 개도국 원전 진출을 겨냥한 보다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WTO체제의 출범으로 이제까지 정부의 보호하에 안주하던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장차 세계와 경쟁이 불가피한 시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조달에 대해서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하는 『정부조달협정』이 '97년에 발효됨에 따라, 국내 원자력 산업 상당 부분이 외국업체에게 잠식당할 우려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갖추는 것이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Ⅲ. 원자력정책의 추진방향

이상과 같은 국내외 원자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치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원자력정책은 원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우리의 원자력기술 및 산업수준이 초기 기초단계의 연구개발수준에서 산업정착화 단계로 성장함에 따라 이제는 원전 중심정책에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국가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입니다.

국내의 원자력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개발·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방향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원자력개발·이용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종합적 장기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2030년을 향한 원자력 장기정책방향』을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정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원자력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부문별 시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개정된 원자력법에 반영하여 법적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을 향한 원자력장기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을 '95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종합계획은 국내 원자력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국가차원의 원자력진흥정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원자로기술개발, 핵연료주기, 원자력안전 등 원자력정책의 주요 10개 부문에 대한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수립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민간 부문에 원자력관련 활동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평화적인 원자력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원자력연구개발 추진에 있어서 중간진입전략(Mid-Entry Strategy)으로, 빠른 시간내에 상업화에 성공한 한국형원자로 개발을 거울삼아 실용화 이전의 기술에 대하여 원자력선진국과의 국제공동/위탁연구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선진기술 도입으로 경·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기술(DUPIC), 핵융합연구 등 첨단 기술·기초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여 이를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입니다.

원자력기술은 거의 모든 분야의 기술이 망라된 종합과학기술로서 그간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해온 바가 지대하며, 특히 타산업에의 기술 파급효과가 커서 관련 기자재산업 및 소재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로 대변되는 발전분야에 재원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국내 원자력 발전기술이 기술 도입기에서 기술 성숙기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제는 원자력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새로이 개척해야 할 단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략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92년에 『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1992~2001)』을 수립하여 2000년대초 원자력기술 선진국 수준 진입을 목표로 정부예산,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및 민간재원 등을 포함 총 1조9,85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원자로노형 기술개발 등 8개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특성에 따라 정부 및 산업계 주도로 역할을 분담하여 착실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추진목표를 보면, 원자로기술분야는 2000년대 초까지 차세대원자로를 개발하고, 원전연료주기기술분야는 원자로기술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경수로에서 사용한 원전연료를 중수로에 사용하는 기술을 미국·캐나다 등과 국제공동연구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현재 계획으로는 2008년경부터는 관련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실용화 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분야에서는 '96년까지 안전성평가기술을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사고관리기술 및 미래원전의 안전성기술을 확보해 나가며,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에서는 방사선 및 RI이용기술, 고준위 RI 및 선원개발, 유용한 RI회수 등을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의 독자기술로 건설된 세계수준의 최첨단 다목적연구로(하나로)를 국가목적에 맞게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자력기초연구분야 뿐만 아니라 원자력첨단소재 및 원전연료 개발등의 산업기술 연구분야까지 그 이용을 확대하고 산·학·연에 널리 개방하여 이용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2000년대 중반 이후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핵융합로가 실용화 될 것에 대비하여 미래의 에너지 확보와 첨단기초과학기술 확보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핵융합 연구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자력기술개발 중·장기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2000년대초에는 국내의 원자력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안전성과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원자력발전소를 국내기술로 설계·건설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는 물론 원자력이 수출산업으로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원자력폐기물관리시설을 최고의 기술력을 투입하여 절대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시설로 건설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원자력분야의 커다란 과제였던 원자력폐기물처분장 부지가 선정되어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 임

시보관중인 원자력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원자력발전량의 증가와 병원, 산업체 등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원자력폐기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원자력폐기물종합관리시설과 지원 시설의 건설·운영계획 및 관련 연구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추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支援에 관한 法律』을 제정('93. 12)함과 아울러 시설유치지역 지원계획공고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후보지역의 주민초청 설명회, 원자력 바로알기 캠페인, 해외 원자력폐기물시설 시찰 등 다각적인 주민이해사업과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범정부적 협조체제 아래 원자력폐기물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리실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94년 12월 22일 "경기도 용진군 덕적면 굴업도 일원"을 최종부지로 선정·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고의 기술력을 투입하여 절대적인 안전성이 보장된 원자력폐기물관리시설을 2001년까지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력폐기물관리시설 지구 개발계획 열람, 지역협의회 구성 및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원자력시설 관련기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여야 하며 지역개발의 핵심으로서 지원과 협조를 다한다'는 기본자세로 지역발전기금 500억원 조성 등 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도 차질없이 수립·시행하여 원자력시설 지역이 지역주민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표본마을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원자력협력외교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해외진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 및 동남아 등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원전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원전건설이 침체되었던 선진국에서도 원전이용에 대한 재검토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등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원자력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측면에서 '80~'90년대에 걸쳐 가장 급속히 발전한 국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며, 특히 '96년 OECD 가입추진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보다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원자력이용을 주도하는 주요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호기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 원자력분야의 기술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일본 등 원자력선진국과의 핵심기술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도상국과는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및 원자력기술수출 기반을 조성해 나가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원자력활동수준에 걸맞은 입지확보 및 영향력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94년말 현재 우리나라가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등 총 11개국이며, 이중 원자력협정이 활발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7개국과는 연계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차세대원자로 개발 등 핵심원자력기술의 이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확대를 위하여 중국과는 '94년 10월 이봉 총리 방한시 체결된 한·중 원자력협력협정을 바탕으로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양국간의 실질적인 원자력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지난해 대통령 동남아 순방시 이루어진 필리핀과의 원자력협력협정 가서명 및 인도네시아와의 원자력협력협정체결에 대한 의향서 교환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지역국가들과의 원자력협력을 강화하여 원자력설계기술 등의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특별히 기여함으로써 시작된 아·태지역의 원자력 협력사업(RCA)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개도국의 원전도입의 타당성 자문과 훈련사업 국내유치 등 역내국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신흥공업국들은 우리의 우수한 원자력사업 및 기술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개도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건설부문 등의 해외진출에 있어 국내기업간에 과도한 경쟁을 하는 것을 수 없이 보아 왔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해외진출전략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등 많은 폐해를 겪었습니다.

인력이나 기술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열악한 입장에서 있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뼈아픈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화합은 불필요한 손실을 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기관간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위한 「원자력대외협력협약체」 구성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무대에서 입지확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95년 9월부터 '97년 9월까지 임기 2년의 IAEA 지역이사국 선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이용규모 등 원자력분야에서의 국제적 위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IAEA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노력하여 나갈 것입니다.

'95년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25주년이면서 조약을 경신하는 해로서, 우리나라의 기본입장은 이의 연장을 지지함과 아울러 핵실험금지조약, 핵무기감축협약도 동시에 협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 관련부처 등과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는 국제핵비확산 공조체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수출통제체제인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및 원자력공급그룹(NSG)에의 가입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원자력안전성 제고시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나라 원자력사에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국내 최초의 자력설계에 의한 다목적연구용원자로(하나로)의 가동과 국내 주도로 건설되는 영광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준공되며,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도 최초로 1,000개 기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원자력시설은 운전중 원전이 10기, 건설 및 시운전중 원전이 6기, 연구·교육용 원자로 4기, 원전연료 가공시설 2개 등이 되어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규모의 원자력시설 보유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력시설의 운영은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일련의 대형사고를 통하여 국가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확보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자력산업 추진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안전성 확보는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설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원자력법령에 따라 철저한 심사·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되, 특히 하도급업체의 품질보증체계 확인을 통한 시공상의 문제점 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전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운영기술지침서 및 관련 기술수준의 준수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원전시설의 안전성증진을 위한 설비의 개선 측면에서는 사업자와 안전규제기관과의 협의·지원체제를 강화하되, 환경·방사선관리 측면에서의 감시·감독 기능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해외전문기관의 초청·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자력 안전정보의 공개도 확대해 나가되 건설추진중인 원자력폐기

물관리시설의 안전성도 국내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설계, 건설의 각 단계마다 철저한 심사·검사를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내의 원전사고 정보 네트워크의 구성·운영과 사고시 협력체계를 위한 방사선 비상대응능력도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94년 10월 미·북한 최종 합의를 통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 환경속에서 더욱 능동적인 외교정책과 통일노력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북한 경수로지원사업은 우리의 표준형원전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으며 다른 대안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로서는 외교적으로 여유를 갖고 교섭하면서 언제든지 한국이 주계약자가 되어 '한국표준형 원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내부적으로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고 기술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수로지원을 통하여 남북 원자력협력관계가 진전되는 경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과 더불어, 북한 기술인력의 훈련, 전문가의 상호파견 및 공동연구 추진 등을 위한 「남북 원자력협력기본합의서」의 채택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축적된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북한에 지원하여 남북한이 동일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전체의 원자력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結 語

우리 원자력계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이를 원자력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 나가기 위하여는 제도와 정책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원자력계 스스로가 발상과 인식의 전환을, 통한 변화와 개혁으로 완벽한 기술개발 여건 조성 및 효율적인 원자력사업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원자력계의 노력의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원자력산업계와 연구계간의 갈등이 표출되는 등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원자력 주요정책 수립시에는 원자력계 주요인사들과 사전협의제도를 확립하고, 그동안 원자력행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전문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자력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전문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이 자리와 같은 민간차원의 원자력협력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세계를 보며 길게는 다음 반세기, 가깝게는 21세기를 대비한다는 자세로 현안문제를 해소하는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기업, 연구소, 대학과도 활발히 협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한 나라 안에서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간에 공조체제를 이루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가족 우리들의 단합된 힘으로 원자력사업에 사회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과 원자력이 과학기술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최첨단분야로 빠르게 인식되어 모든 국민들의 성원속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점 감사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